특집 01

#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목 차

1. 서 론
2. 최근의 환경 변화와 당면 현황
3.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과 평가
4. 향후 보완 과제
5. 결 론

## 1. 서 론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경제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없지 않지만, 현재의 위기가 상당한 충격을 야기할 것이라는 데는 전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제조업과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코로나 19 위기는 이러한 경제구조를 탈피하려던 도전을 약화시켜 기존 경제구조의 고착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화(untact)의 진전이다[1].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원격진료도 경험하고 있다. 생필품 및 신선식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와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재택·원격근무, 화상회의 등의 스마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 하고 있다.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하 한국판 뉴딜)'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114.1조 원)을 투자하여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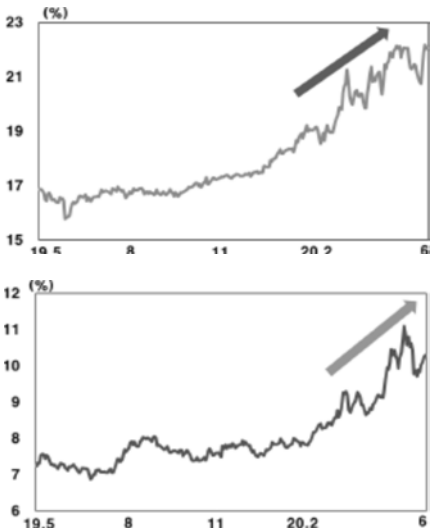
1) 언택트란 '접촉'을 의미하는 'Contact'에 반대를 의미하는 'Un'이 결합한 신조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해 주는 비대면 기술이 사회·경제 속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김난도 외, 2018. '트렌드코리아 2018',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지식 비타민", 2020.에서 재인용)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 하에 총 28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계획은 최근의 환경변화와 우리가 당면한 현황 등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대응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판 뉴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고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최근의 환경 변화와 거시적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당면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영역인 디지털 뉴딜의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 2. 최근의 환경 변화와 당면 현황

코로나 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언택트(Untact) 트랜드가 급부상하고, 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택트 트랜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소비 문화에 익숙한 MZ[2] 세대가 소비 주체로 부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위기는 언택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았던 기성세대들까지도 불가피하게 디지털 경제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언택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등이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재택 및 원격 근무, 화상회의 등 스마트 워크가 확산되면서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하고 있다.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 등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반면에,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기업 및 산업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언택트 트렌드, 디지털화의 진전 등은 제조업의 스마트화, 비대면 서비스업의 성장 등 ICT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촉진시키고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CT 플랫폼 기업들은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서비스 기업들이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서비스 매출 증




주 : 미국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포함(S&P 시가총액),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삼성SDS, 넷마블 포함(코스피 59 시가총액), 2020년 6월 15일 기준
자료 : Bloomberg, 한국거래소 원자료, 한국은행 조사국(2020.6)에서 인용

(그림 1) 미국 5대 플랫폼(위) 및 국내 ICT 서비스(아래) 기업 시가총액 비중

2) MZ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NAVER 지식백과 인용)

〈표 1〉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 2019 | 2020(E) | | |
|---|---|---|---|---|
| | | 3월 | 6월 | 조정폭 |
| 세계 | 2.7% | 2.4% | -7.6% | -10.0%p |
| 미국 | 2.3% | 1.9% | -8.5% | -10.4%p |
| 유로존 | 1.3% | 0.8% | -11.5% | -12.3%p |
| 일본 | 0.7% | 0.2% | -7.3% | -7.5%p |
| 중국 | 6.1% | 4.9% | -3.7% | -8.6%p |
| 인도 | 4.2% | 5.1% | -7.3% | -12.4%p |
| 러시아 | 1.2% | 1.2% | -10.0% | -1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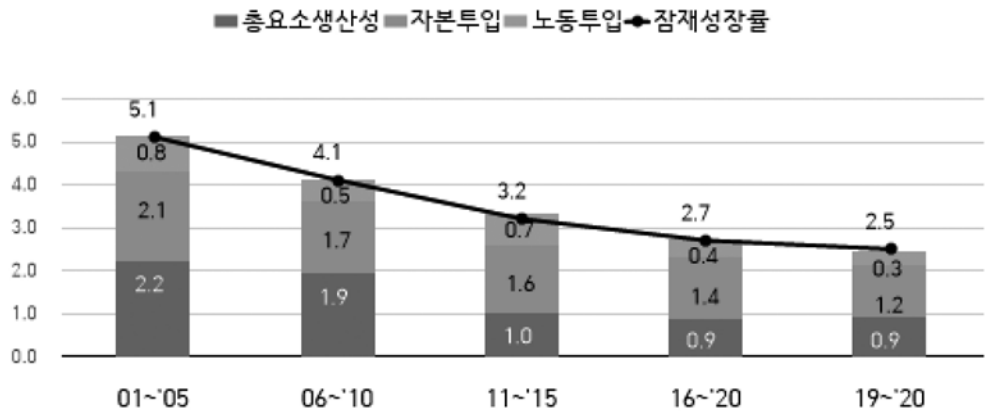
주 :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19가 5~9월 안정세 이후, 10~11월에 재확산 된다는 전제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2020. 6)

가에 힘입어 시가총액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 AI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ICT 내부에서의 영역 확장 뿐만 아니라 의료, 에너지, 금융, 자동차 등 타산업으로 진출하며 영향력을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AI 도입 및 확산, 데이터 활용 증가 등을 통한 지능화 혁신을 추진하면서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붕괴를 주도하고 있다.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한 글로벌 ICT 기업들의 부상은 기업간의 전통적인 경쟁 양상을 시장경쟁에서 생태계 경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M&A가 증가하고, 생태계 혁신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혁신을 보완하고 기술의 서비스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방하여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의 생태계 참여를 유도하고,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생태계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는 글로벌 분업체계의 붕괴와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야기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 OECD가 올해 6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감소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올해 2사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9%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4분기(-3.8%) 이후 21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OECD국가들 중에서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경기침체가 최소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하반기 경제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한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위기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1%에서 최근(2019~2020)에는 2.5%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코로나

3) 한국은행 조사국, "코로나 19 이후 경제구조 변화




자료 : 한국은행 조사국(2020,6)

(그림 2) 잠재성장률 추이 및 요인별 기여도

19 영향의 장기화 등에 따라 노동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자본기여도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1970년 이후 연도별·연령별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고, 절대 규모면에서도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4].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실상 성장률에 대한 마이너스(-) 노동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투입을 통한 기여도와 총요소생산성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투입의 성장기여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 3.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자하여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경제 전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총 28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뉴딜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간략하게 평가

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2020.6에서 재인용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47", 2019.

한다[5]. 디지털 뉴딜 부문은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총 38.5조 원(국비 31.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 산업에서 데이터, 5G, AI 등의 활용 및 융합을 확산시킴으로써 산업별 생산성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의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 원(국비 0.8조 원)을 투자하여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초중고에 고성능 WiFi 100%를 구축하고,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 지원,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또한 대학의 공동활용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 K-MOOC 유망 강좌 개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총 2.5조 원(국비 2.1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세부 과제로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만성질환자 20만 명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 및 질환 관리 등을 추진한다[6]. 또한,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을 위해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을 추진한다. 넷째, SOC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총사업비 15.8조 원(국비 10.0조 원)을 투자하여 SOC 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도시·산단·물류 등의 스마트화로 연관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하천·저수지·댐 등 수자원 원격제어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 및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계획은 코로나 19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진단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7].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5) 이하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 자료를 인용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6) 스마트병원은 5G, IoT 등의 도입을 통해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시 필요한 예약제를 적용할 예정이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자료(2020.7.14.))에서 인용

7)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혁신연구소,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전략-디지털 뉴딜”, FOCUS, 2020. 참고

5G 등 ICT 기술의 활용, 대규모 투자 규모,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등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기대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차원의 데이터 생성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는 것은 향후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투입 이외에도 규제개선,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법제도적 측면에서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거치형만을 제시하여 착용형·투사형 등 다양한 형태의 AR기기 활용 방향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비대면화의 진전에 따라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VR/AR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스마트워크 확산, 플랫폼 노동[8]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 및 원격 근무, 화상회의 등 스마트워크가 확산되고 있지만, 수직적 기업문화, 업무소통의 어려움, 노사간 신뢰부족 등으로 여전히 비정상 근무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근무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업의 혁신 저항이 더 높은 상황이다. 한편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 적용상의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고용안전망 및 사회보장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수를 감안하면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8) 플랫폼 노동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용어, 긱(Gig) 노동, 온디맨드(On-demand) 노동,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디지털 노동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

## 4. 향후 보완과제

본 절에서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향후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은 생산성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 투입 이외에도 규제개선과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오프라인 산업 중심의 규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의 법제도적 효력이 동일시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에 의한 시행, 점검, 감독 등이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들에 대하여 원격점검, 전문가 지시 하의 비전문가 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로봇, 드론 등의 원격제어나 자율운행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가령 건설용 중장비 로봇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운전자 탑승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무인이송 로

봇은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공 분야에 산재한 핵심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물리적인 망분리의 무조건적 적용, 정부·공공기관 내 무선인터넷 및 데이터 로밍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공공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디바이스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촉진하는 한편, 데이터와 관련된 보안 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9]. 공유경제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이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전통산업과 혁신산업의 갈등은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슈이다. 일단 어떤 산업에 사전 규제가 설정되면 신규 사업자에게는 규제 순응 비용(compliance cost)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반면,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규제가 경제적인 지대(rent)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며 일종의 재산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10]. 이러한 측면에서 갈등 해결 방안은 먼저 기존 사업자에 부과되었던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품질 보장이나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으로서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기존 사업자의 소득 매출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스마트워크 확산, 플랫폼 노동 증가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 또한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코로나 19 위기가 확산되면서 재택·원격 근무, 화상회의 등 스마트워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 우려, 재택근무 시행 관련한 제도적 이슈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코로나 19 이슈를 악용한 악성코드·랜섬웨어 유포, 피싱, 개인정보 및 자료유출 등 정보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스마트워크 근무 관련 기술의 보안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재택 및 원격 근무를 도입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관리 감독권과 근로자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 1일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 표준근로시간의 적합성 여부, 초과근무시간의 인정 범위, 연차휴가 사용 등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제도적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워크의 운영기준, 관리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스마트워크 지원을 통해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격근무는 직장과 주거지 간 이동이 어렵고 직장에서의 풀타임 근로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노동시장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규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의 업종별·유형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

9) 예를 들어, 공간정보의 경우 자율차, 드론, VR/AR 등 대부분의 공간기반 디지털 서비스에 필요하나, 현행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엄격함으로 데이터 획득 및 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

10)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면허의 거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로 플랫폼 노동 관련 미래지향적인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협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호 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 노동'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에 포섭하는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결 론

본고에서는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현황을 극복하고, 비대면화와 디지털화라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분야의 적극적인 활용, 대규모의 재정투입과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 등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규제개선, 이해 관계자 갈등 해결 등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저해하는 분야별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 관계자 간 갈등 해소 역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스마트워크 확산, 플랫폼 노동 증가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스마트워크 근무 확산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수직적 기업문화, 업무 소통의 어려움, 노사간 신뢰 부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 노동 증가와 관련해서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의 업종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 관련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계획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당면 현황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 유도는 단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디지털 뉴딜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1]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
[2] 김난도 외, "트렌드코리아 2018", 2018..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년-2047년", 2019.
[4] 한국생산성본부,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전략-디지털 뉴딜", 2020.

[5] 한국은행 조사국,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2020.6.
[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2020.
[7]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8]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6.

## 저 자 약 력

**김 정 언**

이메일 : jekim@kisdi.re.kr

- 1989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1992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2003년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박사)
- 1993년-1998년 기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3년-2005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
- 2014년-2016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산업연구실장
- 2016년-2020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
- 2005년-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관심분야 : ICT 산업 및 융합, 디지털경제, R&D 및 기술혁신